

조기졸업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 ● 김 재 춘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제도교육도 변화의 물살을 피해가기 어렵다. 조기졸업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 이수에 학생의 개별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조기졸업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기졸업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I. 조기졸업제, 필요한 것인가?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활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인 교육활동은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전통적인 교육형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주로 최근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강조되든 배우는 사람이 강조되든, 교육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 즉 학습자의 성장을 준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학습자가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잘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상식과 어긋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육에서 배우는 사람인 학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이나 방법은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가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교육의 이러한 성격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제도화된 교육에서 개별화된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학교는 이른바 능력별로 학년이나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대학이나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제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졸업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산업화가 급진전되고 대중교육체제가 정착되면서 교육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별학생의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시수를 계산하여 학력을 인정해 주는 체제가 등장하였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은 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면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은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과정을 동일한 속도로 이수한다. 학생의 성장에 적합한 내용과 속도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교육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제도교육의 틀 속에 포획되었다.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제도교육도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된다. 한편으로 이전처럼 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좀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과 맥이 닿아 있으며, 능력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졸업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기졸업제는 한편으로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다른 한편 일상불란한 학사운영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여한다는 특징 또한 지닌다. 더 나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교육제도에 포획된 교육을 제도의 포획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기졸업제는 2003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도, 그리고 2005학년도부터는 초·중등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II. 조기졸업제의 운영현황, 어떠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조기졸업제에 대한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기졸업제에 대한 역사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필자는 조기졸업제에 대한 조각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다. 첫째, 숭실대학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숭실대학은 설립 당시(아마도 1906년)부터 능력별 졸업제를 실시하여 3년만에 대학졸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초반기에는 조기졸업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울대나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1980년대 초반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 보건대, 조기졸업제는 해방 이후 한동안 사라졌다가 1980년대 초반에 다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조기졸업이 강조되면서 각 대학은 조기졸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0년 이후 조기졸업생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조기졸업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조기졸업제 현황자료를 간단하게 분석한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기졸업제 현황파악자료 - 2001학년도 이후 조기졸업생 배출 대학수

자료제출 대학 수		미제출 대학 수	총 대학 수
조기졸업생 배출 대학 수	조기졸업생 미배출 대학 수	4 (2%)	201 (100%)
149 (74%)	48 (24%)		
197 (98%)			

〈표 2〉 대학 설립유형별, 대학별 조기졸업자 수

대학	3년(6학기 졸업자수)	3.5년(7학기) 졸업자 수	계
국립A대학교	20	600	620
국립B대학교	11	691	702
국립C대학교	126	0	126
국립D대학교	4	408	412
국립E대학교	67	1,075	1,142
국립F대학교	49	607	656
국립G대학교	42	1,512	1,554
국립H대학교	55	1,181	1,236
국립I대학교	37	449	486
소계	411	6,523	6,934
기타 국립대학	79	1,841	1,920
합계	490	8,364	8,854
사립A대학교	2	513	515
사립B대학교	59	559	618
사립C대학교	76	308	384
사립D대학교	25	431	456
사립E대학교	31	474	505
사립F대학교	51	616	667
사립G대학교	1	445	446
사립H대학교	17	601	618
사립I대학교	290	491	781
사립J대학교	11	486	497
사립K대학교	2	438	440
소계	565	5,272	5,927
기타 사립대학	363	9,128	9,491
합계	928	14,490	15,418
총계	1,418	22,854	24,27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7학년도 1학기까지 13개 학기 동안에 조기졸업자를 배출한 대학은 149개로 전체 대학의 약 3/4에 해당하며, 조기졸업생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는 대학은 48개로 전체 대학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는 한편으로 2007년 현재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조기졸업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다

른 한편 우리나라 대학의 약 1/4이 아직도 조기졸업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조기졸업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대학 설립 유형별 그리고 각 대학별 조기졸업제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6학기 졸업자와 7학기 졸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7학년 1학기까지 13개 학기 동안에 조기졸업한 학생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6학기 조기졸업자는 7학기 조기졸업자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조기졸업자는 한 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하는 7학기 조기졸업자가 대부분이다. 둘째, 조기졸업자 중 국공립대학의 조기졸업자가 36.5%를 차지하며, 사립대학의 조기졸업자는 63.5%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21.4 대 78.6이며, 국공립대학생 수와 사립대학생 수의 비율이 25% 대 75%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졸업자에 비추어 본 조기졸업자의 비율은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조기졸업자가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국공립대학의 8,854명의 조기졸업자 중 78.3%가 9개의 국공립대학 출신이며, 나머지 33개 대학의 조기졸업자는 21.7%만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처지는 비슷하다. 조기졸업자 15,418명 중에서 11개 사립대학의 조기졸업자가 38.4%를 차지하며, 나머지 147개 사립대학의 조기졸업자가 61.6%만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조기졸업자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든 대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 조기졸업자의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 간 조기졸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조기졸업자 현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기졸업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은 대부분 지방소재대학이다. 지난 3년 간 조기졸업

<표 3> 최근 3년 간 조기졸업자 수 현황(300명 이상인 대학)

대학	3년 조기졸업자 수							3.5년 조기졸업자수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국립A대학교	2	1	1	1	3	1	9	18	100	20	106	15	116	375	384		
국립B대학교	16	0	15	3	20	4	58	67	153	60	165	86	199	730	788		
사립A대학교	0	0	0	0	2	0	0	14	95	10	115	16	111	361	363		
사립B대학교	2	0	1	0	1	2	6	52	77	45	36	62	41	313	319		
국립C대학교	8	0	7	0	3	3	21	75	126	70	161	76	215	723	744		
국립D대학교	6	0	10	6	17	0	39	83	195	82	266	83	0	709	748		
사립C대학교	2	0	4	2	10	1	19	12	70	16	90	23	114	325	344		
국립E대학교	10	1	5	0	3	0	19	63	60	58	58	66	12	317	336		
계	46	2	43	12	59	11	163	384	876	361	997	427	808	3,853	4,016		

생을 300명 이상 배출한 8개 대학 중에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 대학이 모두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영남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과 호남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 그리고 충청권에 소재한 1개 대학이 조기졸업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둘째, 지난 3년 동안 조기졸업자를 300명 이상 배출한 8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이 국공립대학에 해당하며, 3개 대학만이 사립대학에 해당한다. 조기졸업자는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특히 조기졸업자를 많이 배출하는 3개의 대학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모두 부산지역과 호남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방국립대학이 조기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조기졸업제 활성화, 부진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국가차원에서 조기졸업제의 운영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조기졸업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조기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서는 조기졸업제 활성화의 부진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대학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상졸업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단순하다. 평균평점 1.75 이상만 받으면 졸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정상졸업에 대한 단순한 규정과 달리, 조기졸업에 대해서는 여러 겹의 규제가 제시된다. 성적이 4.0 이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편입학자·재입학자·성적경고자 등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한 과목의 성적이라도 일정 등급(예컨대 B) 이하인 경우 조기졸업의 자격이 상실되는 대학도 있다. 극단적인 대학의 경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4.3 이상으로 조기졸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즉 졸업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 조기졸업의 신청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이처럼 각 대학의 까다로운 조기졸업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조기졸업을 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다면 대학은 조기졸업에 대하여 왜 그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대학은 학생들의 조기졸업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급적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8학기만 등록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평균 평점 1.75 이상이면 정상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에 대하여 평균평점 4.0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도 여러 부가적인 조건들을 그토록 까다롭게 규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예컨대 조기졸업에 대비하여 졸업이수학점을 6학기나 7학기까지 모두 또는 거의 이수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의 평균평점은 3.8로서 해당 대학의 조기졸업규정인 4.0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경우 이 학생은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더 이상 이수할 학점이 없는 데도 오로지 정상졸업을 하기 위해 한두 학기를 추가로 등록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이러한 조기졸업관련 규정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자 해도 교육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조기졸업에 대한 각 대학의 까다로운 규정은 아무래도 교육 외적인 데서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조기졸업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

기졸업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생이 늘어나더라도 하면 곧바로 조기졸업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바꾼다.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조기졸업을 위한 성적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모 대학은 조기졸업에 요구되는 평균평점이 2000년 이전에는 2.0 이상이었었는데, 2002년에 3.75 이상으로 바꾸었다. 충청권의 모 대학은 조기졸업에 요구되는 평점기준을 4.0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생이 많아지자 성적기준을 4.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기졸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한 학생들은 이미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했거나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1~2과목만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에게도 3~4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문제로 파악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제안한, 한두 과목만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해 주자는 방안에 교육부는 대학재정의 부담을 염려하여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의 지속적인 협의 후에 교육부는 졸업학기의 수강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 수업료의 2/3만을 납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힘겹게 합의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조기졸업을 까다롭게 규정한다면 그리고 대학이 조기졸업을 선호하지 않는 데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대학의 등록금수입 감소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IV. 조기졸업제,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조기졸업제는 미래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조기졸업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조기졸업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조기졸업조건을 현재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은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기준을 낮게는 3.75에서 높게는 4.3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기준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조기졸업제는 유럽을 포함하여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성·창의성·자율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대학의 조기졸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1.75의 평점평균이면 대학의 정상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기준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기준을 3.5 또는 3.75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적 이외의 제한조건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조기졸업규정을 완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학의 재정상태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의 조기졸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처럼 등록학기마다 이수학점과 상관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지불하는 등록금 지불제도를 이수학점기준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록금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별 등록금 지불제도는 정책의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을 탐

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기졸업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록금수입 결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졸업생 수에 상응하는 정원의 입학 T/O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대학의 조기졸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졸업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과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않도록 제도화하고, 각 대학이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졸업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기졸업제는 효율성을 위한 근대적 교육제도에 의해 포획된 교육을 해방시켜 주는 첫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

김재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UCLA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영남대학교 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교육과정학회(AACS) 이사, 유럽에 본부를 둔 국제교과교육매체학회(ARTEM) 이사,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수학습활동의 이론과 실제 등 다수가 있다.